

시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전남광주특별시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시민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특별시가 이들에 걸맞은 위상과 '특별함'을 갖춘 도시가 되길 갈망하고 있다. 이번 통합이 단순히 전남과 광주의 행정적 결합을 넘어, 이전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새로운 미래 도시의 탄생을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양이다.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전남 광주특별시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핵심 과제들이다. 이러한 대책이 바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면 정책적 대응의 시급함은 더욱 절실해진다. 최근 '한국 인구학'에 게재된 유상현 교수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남 출생 청년 10명 중 7명은

35세 이전에 고향을 떠나며, 광주 또한 2명 중 1명꼴로 타지로 향한다.

청년 인구의 잔류 비율은 전남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광주가 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청년 절반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지역 고령화를 앞당기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약 절반이 취업과 이직 문제로 떠나며, 나머지는 교육 기회와 주거 환경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우선 교육 문제부터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수준 높은 초·중·고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자녀 교육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는 학부모가 상당수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필수다. 지역 고교 졸업생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정책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은 도시 생존의 핵심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인재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다. 기업이 전남 광주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이 민관 협력 속에 뒷받침돼야 한다.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연구개발(R&D)부터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갈등 해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이다. 즐길 거리의 부족과 문화적 결핍은 지역 정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갖게 됐다.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은 '특별한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할 때다. 시민들이 특별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도시의 주인으로서 힘을 모아야 한다.

社說

불평등 종합격차지수 가장 높은 전라·광주권의 현실

민주연구원의 2026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취약한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통계연보를 활용해 연구원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의 종합격차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광주·전남·전북으로 묶은 전라·광주권의 경우 41개 시·군·구 가운데 39%가 '하위 20%'에 해당했다.

6개 권역 중 최고 수치다. 이어 대구·경북권 32.3%, 충청권 25%, 강원·제주권 25%, 부울경권 18% 순이었다. 수도권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대로 전국 상위 20% 비율은 수도권이 37.9%로 가장 높았고, 전라·광주권은 9.8%에 그쳤다. 연구원은 대포 연구로 복합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고차방정식인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가자 연례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을 시작으로 짝수년도에는 소득·자산 지표의 현황과 쟁점을, 홀수년도에는 소득 등 불평등 실태와 주목할 만한 이슈를 통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2026년에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

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 밝혔듯 삶의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망라해 측정했다. 그런데 전라·광주권은 영역별로 보면 해남·고흥·보성·완도 등 남해안은 일자리가, 보성·장흥·강진은 인구, 고흥·영암은 소득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됐다. 광주는 주거였다.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양호하지만 교육 지표에서 밀렸다.

연구원은 일자리와 사람, 소득, 자산 등 모든 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과밀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하향 평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보전이 아니라 지역별 요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생활 인프라가 보완돼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 주도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5.3특전과 부동산 시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전라·광주권 불평등 격차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과 일자리는 충청권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졌다. 광주·전남은 특별시 출범을 앞뒀다. 지역 내·외부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법규 순차 정비 광주·전남 행정통합 순조롭길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양 시·도의 현행 법규 중 82건을 통합해 512건을 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 특별시 행정 시스템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또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도 반영한다.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질병인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다. 시민들의 공감대 아래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시 분리 뒤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일이다. 초기의 혼란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화돼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통합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대한 담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특별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 전남도와 도의회,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를 발족,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시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의 성공,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약대로 적극적인 권한 이양, 과감한 재정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당면치사다.

순탄하게 출발해야 한다. 조금만 더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담보할 새 역사를 마주하고 있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골절 발생 시 극심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보이며 환부가 멍이 들거나 발적부종의 염증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골절은 항상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인데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고관절은 골반뼈와 허벅지뼈가 이루는 관절로 보행운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관절이다. 고관절 골절 시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혹은 고정술 같은 수술치료를 받고 회복되기까지 침상안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복을 위한 침상안정이 길어질 수록 목창, 근력 약화,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간다. 노인 고관절 골절은 합병증으로 인해 1년 내 사망률이 20~3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골절을 일으키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 T score로 판단한다. 수치가 -1.0 이상이면 정상이며 -2.5에서 -1.0 사이는 골감소증, -2.5보다 적으면 골다공증으로 분류한다. Z score는 환자의 측정값을 환자와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값과 비교한 수치이다.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이전 남성에 사용한다. Z score는 -2.0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영상검사로 X-ray, CT, 초음파를 주로 활용한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골 형성을 촉진하거나 골 소실을 예방해 골량 감소를 막아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치료법은 양방의학의 약물치료, 한방의학의 한약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이 있다.

약물치료는 다양한 제제를 처방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로 파골세포의 기능을 감소시켜 골 흡수를 억제해준다. 하지만 소화불량, 턱뼈괴사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칼시토닌제제도 골 흡수를 억제한다. 골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부갑상선호르몬제제를 투여해 골모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골절을 개선해주는 비타민 제제 또한 사용된다.

한약치료는 골 밀도를 개선해주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다. 조골세포의 증식 및 활성화를 통해 골질의 위험을 줄이며 기력하약을 동반한 경우에 효과적인 경옥고(瓊玉膏)를, 골다공증과 적혈구를 개선하며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적인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을, 요통을 동반한 골다공증에는 청아원(靑娥元)을 주로 처방한다.

생활습관 개선은 금주와 금연이 기본이다.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은 칼슘의 요배설을 늘려 골량을 감소시키니 짜지 않은 담백한 식사가 좋다. 당연히 칼슘을 다량 함유한 유제품, 콩류, 채소류(녹황색 채소), 해조류 등을 섭취해야하며 비타민D 함량을 위해 일광욕을 하는 것도 필수이다. 골량은 운동 자극에 따라 증가하므로 적절한 운동과 함께 근력을 길러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다. 기둥에 구멍이 생겨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건강한 기둥이 세워지도록 미리 관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은 뼈의 골량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질환이다. '골다공'은 뼈속이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골량은 일반적으로 35세부터 감소하며 여성에서는 폐경 후 3~5년 동안 급속도로 골량이 감소한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화와 폐경이 가장 흔한 요인이며 칼슘과 비타민 D의 결핍 또한 지목된다. 폐경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폐경 이후 감소하게 된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약화시키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파골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돼 골 흡수가 증가해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은 골아세포에 작용해 골 형성을 촉진하므로 남성에서는 골다공증이 드물다.

증상은 골절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 골절을 제외한 증상으로는 척추뼈가 약해져서 체중을 버티기 힘들어하며 척추가 후만 변형된다. 그리고 신장이 감소하기도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골절이다.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허리를 삐끗하거나 기침

독자투고

노쇼 사기의 실체 바로알고 대처하자

최근 농도인 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노쇼(No-Show)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주요 업종 이외에 병원, 키즈카페, 주유소, 세탁소, 당구장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기존 소방, 지자체를 사칭한 소방점검 수법을 변형해 식약처 등을 사칭하는 등 치밀하고 대범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상실감으로 자영업자들은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요즘 가짜뉴스 불경기로 인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나쁜 범행수법이라 할 것이다. 노쇼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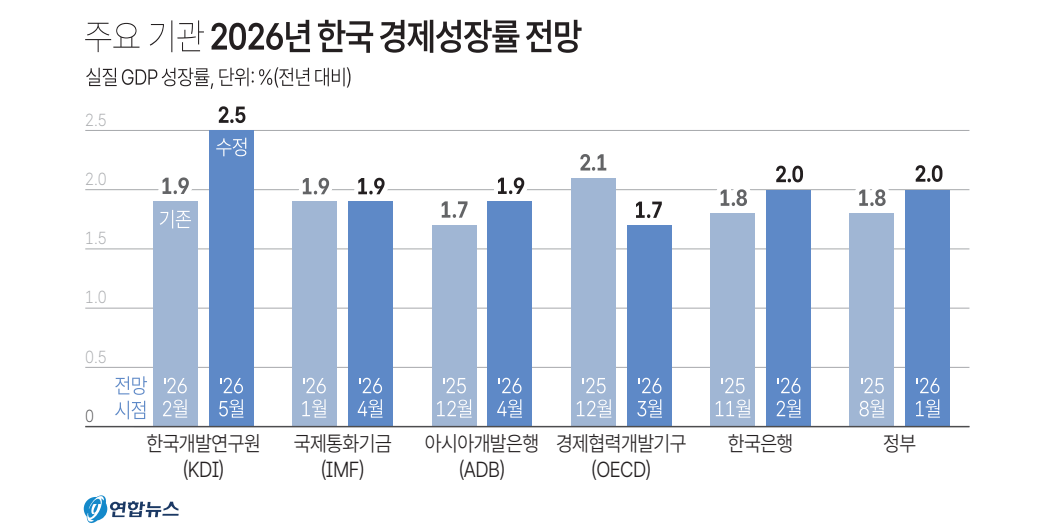
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사전 확인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대량 주문이나 소방, 공공기관을 가장한 공문서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무엇보다 먼저 신분 등 진위여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음식 등 관련 업종 취급품목에 대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정액의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물론 경찰에서도 노쇼 범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범죄피해 예방에 있어 왕도는 없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로 의심이 될 경우 차분히 재확인하는 절차를 절대 잊지 말자. 자영업자 모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쇼 유형 및 대처방법을 평소 숙지하는 한편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 나와 이웃의 범죄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에 상실감과 치명타를 주는 노쇼 사기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악질 범죄행위를 유념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피해 위기 순간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0.6%포인트(p) 끌어 올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7%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자 국내외 기관들은 속속 눈높이를 올리는 분위기다.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전망치는 4월 말 기준 평균 2.4%로, 3월 말에 비해 0.3%p 올라갔다. 3% 전망치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일 종전보다 0.7%p 높은 2.8%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평가했다. /연말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